

건설동향브리핑

제542호 (2015. 12. 28)

■ 정책 · 이슈

- 2016년 경제정책, ‘경제성장 정상화 및 활력 강화’에 중점
- ‘규제 프리존’ 정책의 실현성 확보를 위한 조건

■ 경영 · 정보

- 건설 모듈화 현황과 활성화 동인

■ 경제 동향

- 2015년 주택 거래량 120만 건 육박, 2006년 이후 최고치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첨단 건설기술의 적용 확산을 위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6년 경제정책, ‘경제성장 정상화 및 활력 강화’에 중점

- 상반기에 재정 집중,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지역산업 연계 강화 -

■ 1/4분기부터 재원 집중, 민간투자 확대 도모 및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경제성장의 정상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 내수중심의 경기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회복을 이끌기 위해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 회복, 리스크 관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과 관련, SOC·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배정해 원활한 계약과 발주를 지원하고, 공기업 투자와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발표함.
 -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2015년 1/4분기보다 8조원 상향된 125조원으로, 경기효과가 큰 SOC 분야 및 일자리 관련 3.5조원의 예산을 미리 배정해 조기 발주 유도
 -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6조원 확대
 - BTO-rs/a 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 확대 유도
- 내수·수출 회복과 관련,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기업형 임대주택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공유지, 도심재정비사업 연계,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민간 재무적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기금을 활용한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임.
 - 또한,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모델 공급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 방안>

구분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 회복	리스크 관리
정책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감중시 거시운용 ▶ 재정 등 조기집행 ▶ 공공기관 등 투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절벽 등 경기대응 ▶ 규제완화·민간투자 활성화 ▶ 대중 진출 등 수출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적 기계부채 관리 ▶ 선제적 기업부채 관리 ▶ 대외건전성 제고
건설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일자리 예산 3.5조원선 배정 - 공공기관 투자계획 6조원 확대 - 민간투자 확대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 에너지 신산업육성 25조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관행 정착

자료 : 기획재정부, 2015.12.16

- 리스크 관리와 관련,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국내 가계·기업부채 관리를 강화
 - 탄력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단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취약 부문의 채무재조정 확대가 이뤄질 예정임.
 - 특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 지방 5월)으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 취급 및 ‘빛을 나누어 갚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지역 산업 연계 강화

- 지난 2014년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정부는 2016년에 구조개혁 완성과 창조경제 확산으로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힘.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모토로 진행되었음.
- 이 가운데 ‘역동적인 혁신경제’와 관련해 정부는 창조경제 외 지역경제 간 연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함. 14개 시·도에 전략산업을 위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지역의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 세종은 1개), 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할 계획임.
 - 또한,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임.
 -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입지 관련 규제특례 및 지원이 향후 이뤄질 것이며, 또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도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힘.

■ 건설 부문이 내수 회복의 핵심 역할, 재정사업 상반기 집중 전망

- 정부 발표문을 살펴본 결과,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건설 부문이 국내 경제 회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노력과 내년 4월 총선 영향으로 상반기에 공공사업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규제 프리존’ 정책의 실현성 확보를 위한 조건

- 과거 경제특구 개발과는 차별화해야, 법·제도 등 세부 추진기반 마련 시급 -

■ 지역경제 발전 도모가 목적

-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음. 도입 취지는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임.
- 규제 프리존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2개씩의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 육성하기 위하여 핵심 규제를 철폐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임.

<전국 14개 시·도별 지역 전략산업 현황>

지역	전략산업	지역	전략산업
부산	해양관광, 사물인터넷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충남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웰니스 산업	충북	바이오헬스, 화장품
광주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전남	에너지산업, 드론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의학	전북	탄소산업, 농생명
울산	친환경자동차, 3D프린팅	경남	지능형 기계, 항공산업
세종	에너지 IoT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강원	스마트헬스케어, 관광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인프라

- 정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각 시·도별 지역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함.
- 새로운 시장창출과 사업화를 위해 규제 프리존 내에서 시범사업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
-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입지 등의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임.

■ 평가

- 지자체들은 이번에 발표된 규제 프리존 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지역 단위 전략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담고 있어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에 배치된 27개 신사업의 중복성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다수의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이 과감하고 파격적이지 않으면 현실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이번 발전방안에 수도권 규제를 제외한 것에 대한 비판도 큼.
 -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공장 신·증설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산업 수요가 큰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시킨 것은 규제 완화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앞서 규제 프리존을 시행(2013년 국제전략특구제도)한 일본이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 없앤 것과는 대조적임.

■ 실현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이번 규제 프리존이 앞서 추진되었던 기업도시, 경제특구개발 등 성과가 미흡했던 지역 발전정책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선택과 집중’ 없이 추진한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반감된 사례를 볼 때, 이번 규제 프리존은 조속한 시한 내에 법, 제도 등 세부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집중적인 투자와 규제 완화책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발생시킬 필요가 있음.
- 규제 프리존들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등 도로·교통 및 산업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뒷받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관광산업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된 부산, 강원, 제주도의 숙박 공유 허용도 지역적 연계를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임.
- 현재 각종 산업에 대한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도 지역발전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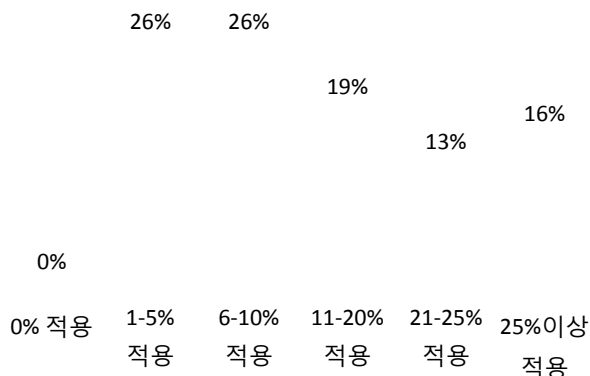
건설 모듈화 현황과 활성화 동인

- 미국 기계 및 전기 건설 부문에서 모듈화 확산, 기업 전략 차원의 추진 검토 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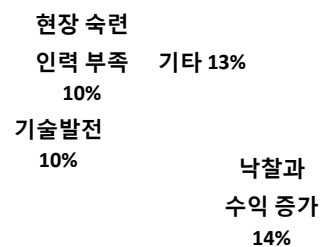
■ 현황

- 건설산업에서의 모듈화(Modularization)는 시설물의 일부를 건설 현장의 설치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공·조립하는 생산 방식임.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현장 기능인력 수요 절감, 안전 확보 등을 제공하는 기술로 인식됨.
 -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McGraw-Hill사의 설문조사¹⁾에서는 미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혁신 기술 분야의 하나로 사전제작 및 모듈화가 선정되었음.
 - 사전제작(Prefabrication)은 공장에서 부재를 제작하는 생산방식을 일컫으며, 일반적으로 모듈화와 함께 언급되고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함.
- 미국 건설 부문 컨설팅사인 FMI사의 설문조사²⁾에서 기계 및 전기 건설업체의 48%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11% 이상에서 사전제작 부재를 사용하고 있고, 52%는 진행 중인 사업의 10% 이하에서 사전제작 부재를 사용한다고 응답함.
 - 또한 조사 기업의 81%가 사전제작 공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미국의 기계 및 전기 건설산업 부문에서는 사전제작이 확산되어 있음.

<사전제작 부재를 사용하는 사업 비중>



<사전제작 활성화의 동인>



1) McGraw-Hill Construction(2008), Key Trends in the European and U.S. Construction Market Place : 해당 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현장의 안전 및 보건 기술 향상(29%)이었음. 그 밖에 녹색빌딩 기술(16%), 신공법 및 프로세스 기술(13%), 인텔리전트 빌딩 및 인프라(13%), 사전제작 및 모듈화(13%)가 선정되었음.

2) FMI(2013), Prefabrication and Modularization in Construction, 2013 Survey Results.

■ 활성화 동인

- FMI 보고서는 모듈화와 사전제작이 이미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욱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사전제작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환경적 요인으로는 ‘비용절감에 대한 지속적 압박’, ‘시장에서의 모듈화 요구 증가’, ‘숙련 기능인력의 부족’,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활용 증대’, ‘건설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 등이 있음.
- 기계 및 전기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업체, CM사를 대상으로 포함한 FMI 조사에서는 사전제작 활성화의 동인으로 ‘종합건설업체의 공정개선’(21%),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19%), ‘하도급업체의 낙찰 가능성 및 수익 증가’(14%), ‘발주자의 가격인하 압박’(13%), ‘사전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발전’(10%), ‘현장 숙련 기능인력의 부족’(10%) 등을 언급하였음.
 - 특히, 기계 및 전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27%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 또한 사전제작은 ‘공기 단축’, ‘건설비용 절감’, ‘수익 증가’, ‘경쟁우위 확보’, ‘작업자의 안전 향상’, ‘품질 향상’, ‘재작업 감소’, ‘폐기물 감축’, ‘현장 숙련인력 수요 감소’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시사점

- 미국 건설업체들의 모듈화 동향은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달성하기 위한 건설 현장 혁신 노력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함.
- FMI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기업의 40%가 기업의 주요 전략으로 모듈화와 사전제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조사 기업의 61%는 향후 3년 동안 사전제작 비중이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하지만, 모듈화와 사전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거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리스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며, 모듈화의 장점만을 의식하여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 역량에 따른 전략적 고민이 우선되어야 함.

성유경(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2015년 주택 거래량 120만 건 육박, 2006년 이후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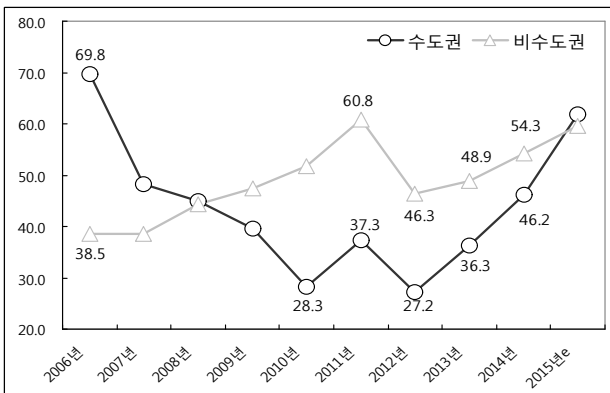
- 수도권과 비아파트가 증가세 견인, 전세가 상승 지역에서 거래량도 증가 -

■ 11월까지 21% 증가, 연간으로는 120만 건 근접 예상

- 2015년 1~11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 추이를 고려할 때, 연간 120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의 비아파트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2015년 1~11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110만 6천건, 전년 동기 대비 21.0% 증가함.
 - 수도권은 56만 9천건으로 전년 동기비 33.9%, 지방은 53만 7천건으로 전년 동기비 9.8% 증가함.
 - 12월 들어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 연간 증감률은 1~11월에 비해 감소하겠지만, 연간 주택매매 거래량은 115만~120만 건 범위로 예상됨.

<연간 주택매매 거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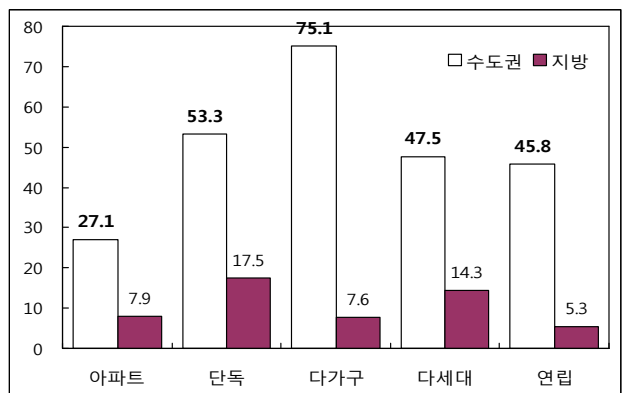
(단위 : 만호)



주 : 2015년은 1~11월까지 증감률을 기준으로 도식화함.
자료 : 국토교통부

<1~11월 전년 동기비 유형별 매매 거래량 증감률>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 수도권은 비아파트 · 서울 중심 거래 증가

- 2015년 1~11월까지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38만 1천건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의 43만 7천건 이후 처음으로 연간 40만 건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 27.1%, 단독주택 53.3%, 다가구주택 75.1%, 다세대 47.5%, 연립주택 45.8% 증가. 2014년은 모든 유형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은 비아파트 증가세가 두드러짐.

- 서울의 거래량 증가폭이 가장 컸고,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거래량도 증가
 - 수도권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서울 44.9%, 경기 17.1%, 인천 20.7% 증가함.
 -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시군구 중 다수가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임.
 - 서울은 강서구, 동작구, 강동구, 양천구, 관악구, 마포구, 영등포구, 성북구, 광진구, 강북구에서 50% 이상 증가함. 경기는 과천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의 증가세가 확인됨.
- ※ 부동산114(주) 기준 2015년 1~11월 전세가격 상승률 : 서울 강서구 20.5%, 성북구 18.5%, 관악구 17.8%, 강동구 14.5%, 경기 파주시 22.9%, 양주시 18.1% 등
- 수도권은 규모에 상관없이 고른 증가세이나, 서울은 중대형 증가세가 두드러짐.
 -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소형(60㎡ 이하) 33.9%, 중형(60~85㎡ 이하) 34.6%, 대형(85㎡ 초과) 32.8% 증가. 특히, 서울의 중형과 대형 주택은 각각 53.1%, 50.7% 증가함.

■ 지방도 비아파트 증가, 광역시는 가격 상승에 비해 제한적 증가

- 지방에서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거래량 증가폭이 높게 나타남.
 - 지방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37만 2천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함.
 -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17.5%, 다가구주택 7.6%, 다세대 14.3%, 연립주택 5.3% 증가
- 부산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는 높은 가격 상승률에 비해 거래량 증가세는 높지 않음.
 - 부산은 26.3%로 지방 광역시 중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10.3%), 대구(6.9%), 대전(5.0%), 울산(-2.1%) 순임.
 - 기타지방에서는 세종(31.1%), 전남·북, 경북, 강원에서 10% 이상 증가한 반면, 충남(-7.3%), 충북(-6.7%)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 2016년 재고주택의 매매 거래량 감소할 가능성 높아

- 2016년은 금융여건 악화 및 신규공급 증가의 영향으로 2015년과 같은 거래량 증가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2015년 2년 연속 주택 거래량이 100만 건을 넘어섬. 일정 부분 주거이동 및 투자수요가 소진되었다는 점에서 2016년의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2. 21	서울경제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경제 상황 변화와 2016년 주택시장 전망 토론회’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 최근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이슈포커스	공동주택 하자 기획 소송의 최근 동향 및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 분쟁 처리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미흡한 틈새를 파고들어 과대 포장된 경제적 이익 보장으로 입주민을 오도하는 하자 기획 소송이 이미 낯설지 않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민들은 하자 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입주민의 권익 보호보다 소송 대리인 자신의 이익 추구를 우선하는 하자 소송을 ‘하자 기획 소송’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자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는 분양 광고, 분양 계약 등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 여부와 연관성, 구체적인 하자 판정 기준, 하자보수 청구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관계, 허용 균열 폭, 하자보수 도장의 범위 등을 들 수 있음. • 하자 기획 소송은 입주민과 건설사 등 당사자 간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하자 보수를 지연케 하고 거주 불편이나 소송 종료시까지 위험에 노출시켜 놓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시장의 바이러스와 다름없다고 할 수 있는 하자 기획 소송은 입주민이나 건설업체 모두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 등 심각한 피해를 안겨줄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됨.

■ 대한사회복지회에 후원금 전달

- 연구원은 12월 22일(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대한사회복지회 본회에 후원금을 전달하였음. 후원금은 영아임시보호시설의 영아들을 위해 쓰일 예정임.

■ 「CERIK 도서회원」 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보고서 및 CERIK저널, 건설동향브리핑 등 연구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관계자 및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음.
- 도서회원에게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정책 연구 자료 및 각종 연구 발간물, 정기 간행물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수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문의 : 기획조정실 기업지원팀(Tel. 02-3441-0848)

첨단 건설기술의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산업은 왜 첨단 건설기술의 적용과 확산에 더딘 것일까? 물론, 정부 R&D와 각종 연구를 통해 관련 부문의 움직임은 꽤 활발하다. 문제는 실제 건설사업의 적용을 위한 유인과 실행이 부족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공공과 민간 발주자가 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에서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타당한 의견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첨단건설기술의 적용 동기의 많은 이유가 건설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수요자의 인식이 부족해서라고 변명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발주자의 정책과 기준, 제한된 예산, 가격 중심의 입찰 제도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과 사업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의 혁신을 촉구하였다. 즉, Input(정책, 제도, 기준, 발주자의 역량 등)이 좋아야 Output(건설과정 및 완성 시설물 등)이 좋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국내 건설산업을 둘러싼 복잡다대한 제도적 환경을 감안했을 때 일거에 이를 해소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

건설기업은 매출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해야 하는 주체인 만큼 이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을 추구함과 동시에 공급자 그룹의 전향적인 기술 혁신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때이다.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이지만 국가적 랜드마크 사업이나 몇몇 사업은 첨단 기술 혁신 선도사업으로 지정하여 가용한 첨단 기술을 마음껏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은 국내외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민간투자형 사업에서도 민간의 창의적 기술 적용의 유입이 더욱 일어나도록 관련 제도나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수적이고 안전이 강조되는 건설산업에서 제조업과 같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 경험과 환경이 무르익지 않은 첨단기술의 적용은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모두 줄 수 있다. 완전한 성공은 어디에도 없으며, 비약적인 발전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많은 첨단 기술은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과거의 트렌드와 같이 일시적으로 반짝하였다가 건설산업을 스쳐 지나갈 것이다.

최석인(연구위원 · sichoi@cerik.re.kr)